

칼럼

건설산업 내실화의 첫걸음, 발주자 중심의 제도 혁신



이 인근
LH 토지주택연구원장

연말이 다가온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안전을 되짚어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지만, 거듭되는 인명 사고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올해는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

건설산업 내부에서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건설 수주액도 5년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나, 내년도 SOC 투자 확대가 가져온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감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형 공사 입찰 담합에서 시작된 무더기 제재로 건설업계는 연일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관련된 업체는 흥역을 치르고 있다. 2016년 본격 도입 예정인 종합심사나찰제의 경우 시범사업의 결과를 두고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며,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은 건설기술 영역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내 건설시장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시장 규모 정체, 경쟁 심화, 수익성 악화 등의 특징을 보이는 이러한 전환기에 각 주체는 내부 혁신과 체질 개선을 통해 산업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건설산업 내에서의 역할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혁신을 주도할 책임자는 공공 발주자일 것이다. 수주를 기반으로 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건설 행위의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발주' 관련 제도는 혁신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가 중심이 되는 발주제도 혁신이 건설산업 내실화의 출발점일 것이다.

건설사업의 성공에는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충분한 수행 역량을 갖춘 계약 상대방의 선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가격과 운으로 귀결되는 현행 제도는 과당 경쟁과 사회적 비용 증가를 가져왔다.

발주기관은 법령과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방법을 채택하기 어렵다. 발주기관의 선택을 제한하는 획일적 제도는 사업관리에 경직성을 초래해 효율성과 성과 저하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공공사업의 발주제도 개선은 '비정상적 정상화'라는 현 정부의 구호에 잘 부합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이제 각 기관은 나름의 조달 철학과 비전, 전략을 수립하고, 책임성·공정성·투명성에 기초한 발주 시스템 혁신과 내부 기반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사업수행 방식, 발주 단위, 입·낙찰 기준, 계약 조건, 사후관리 사항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재량권을 확보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과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제도 또한 다양한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사업에 맞춤형 전략을 선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나아가 기관별 고유 스탠더드를 추구하는 것이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건설업계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의 밑그림에 따라 현실성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발주제도의 선진화를 통하여 업체에 축적된 능력은 경쟁력 향상과 해외 시장 진출의 동력이 될 것이다. CERIK